식품 안전 정보

1. 위생 점검

1) 식약처 “마라탕 · 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2024-03-15,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 · 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4천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위생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음. 위반 사항별로는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5곳으로 그다음이었음. 이 밖에 위생모 · 마스크 미착용(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이 주된 적발 사유였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이번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거 검사에서는 238건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식약처는 2021년부터 분기별로 품목을 나눠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올해는 마라탕 · 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 조리 음식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음.

2)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위생 점검서 11곳 적발

(2024-04-08,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영 · 유아용 이유식, 초콜릿 ·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천422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생 기준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음. 적발 업체 가운데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자가 품질 검사 위반 2곳, 표시 · 시설 기준 위반 등 사례가 드러났음.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아울러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한 결과, 울산 남구 소재 업체 ‘그리닉’의 영 · 유아용 이유식 ‘쌀미음’이 대장균군의 일종인 크로노박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됨.

3) 식위법 위반한 학교급식 등 27곳 ‘적발’

(2024-04-15, 대한급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한한 학교급식소 등 2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앞서 식약처는 학교와 유치원급식 등 1만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3만4023곳을 점검했음. 점검은 17개 지자체 및 시 · 도교육청이 함께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 검사도 병행했음.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임. 또한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 이 상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 · 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며 "나머지 검사 중인 323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이 확인되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이어 "앞으로도 학교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음.

4) 충남도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업체 32곳 적발

(2024-05-26, 연합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3~7일 축산물 취급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음.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거나 메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임. 원산지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됐고, 표시된 소 개체 이력 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한우 유전자와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급식 2건,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불일치 사례가 확인됨.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됨.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음.

2. 식품첨가물

1) EU 식품 첨가물 '질산염 · 아질산염' 규제 강화

(2024-03-22, 식품음료신문)

EU가 작년 10월 9일에 개정된 위원회 규정(EU) 2023/2108에 따라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대한 더 강화된 지침을 설정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니트로사민 등 유해한 발암성 화합물에 대한 소비자 노출을 줄이면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아와 같은 식품 매개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아질산염과 질산염 사용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설정했다고 밝혔음. 니트로사민은 가공된 육류 제품, 가공된 생선, 코코아, 맥주 및 기타 알코올 음료, 가공된 야채, 시리얼, 우유 및 유제품, 발효, 절임 및 양념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음. 유럽 식품 안전청(EFSA)가 실시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해당 규제는 작년 초 EU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음. EFSA가 시행한 동물 연구를 바탕으로 니트로사민에 노출된 설치류에서 간 종양 발생 위험을 이 개정법의 근거로 삼았음. 이번 개정법은 EU 내의 다양한 제품 및 제조 조건을 조정할 것으로 보임. 업계 모두에게 전체 공급망에서 EU 식품의 아질산염 및 질산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으로, 식품업체들은 2년의 전환 기간 내 개정된 표준에 따른 준비를 마쳐야 함. 아질산염 무첨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음. 지난 2022년 이 첨가물들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저명한 과학자들이 정부에 서한을 보내 질산염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2014년 유럽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살균 육류 제품에 첨가되는 일반적인 아질산염의 양은 EU에서 정한 최대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6년 산업 및 다양한 육류 제품과 관련된 추가 연구에서도 아질산염의 최대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 Foodwatch France와 같은 일부 단체에서는 식품에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올해 초 유럽 의회의 환경, 공중 보건 및 식품 안전 위원회(ENVI)에서도 동의안이 논의되기도 했음. 실제로 EU 식품분류법에'아질산염무첨가 제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긴 이래로 현재 아질산염이 첨가된 제품은 46%가 감소함. EU 보건 식품 안전 위원회 위원 Stella Kyriakides 국장은"식품의 아질산염 및 질산염 첨가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우

리는 유럽의 암 퇴치 계획(Beating Cancer Plan)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식품업계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가능한 한 이를 더욱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한편 새로운 기준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위원회 규정(EU) 1333/2008과 아질산염(E 249-250) 및 질산염(E 251)에 관한 위원회 규정(EU) 231/2012의 부록을 개정하는 광범위한 문서에 요약돼 있음. 이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No 1333/2008의 부록 II과 위원회 규정(EU) No 231/2012의 부록을 개정함. 이러한 수정 사항은 식품 첨가물, 아질산염(E 249-250) 및 질산염(E 251-252)에 적용됨.

2) 과자 · 빵 속 식품첨가물 7가지, 당뇨병 위험 높인다 (2024-04-30, 헬스조선)

케이크, 과자 속 식품 첨가물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제2형 당뇨병은 잘못된 식습관 ·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이 분비돼도 세포가 인식하지 못해 생김.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미 2021년 기준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5억 2900만명으로 집계됐음. 2050년엔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당뇨병 환자일 것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음.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E)와 프랑스 국립보건의료연구소(INSERM) 공동 연구팀은 가공식품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특정 식품 첨가물 중 7가지 유화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 유화제는 물과 기름 등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이 섞인 채 안정된 상태로 있도록 돕는 식품첨가물임. INRAE 버나드 스루르(Bernard Srour) 교수는 "유화제는 케이크, 비스킷, 아이스크림, 초콜릿 바, 빵, 마가린 등 많은 가공식품에 첨가돼 모양, 맛, 질감 등을 개선하고 유통기한을 늘린다"고 했음. 연구팀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식품 첨가물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스 국가 영양 코호트 연구 'NutriNet-Santé'에 참여한 10만 4139명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했음. 실험 참가자들은 6개월마다 3회 24시간 식이 기록을 14동안 제공했음. 연구팀은 소비된 식품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식품 첨가물의 존재 여부와 양을 7년간 추적 · 분석했음. 그 결과, 총 7가지 유화제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했음. 확인된 유화제는 제3인산칼륨(E340), 구아검(E412), 잔탄검(E415), 모노 · 디아세틸타르타르산 에스테르(E472e), 구연산나트륨(E331), 카라기난(E407), 아라비아 검(E414) 등이었음. 제3인산칼륨은 하루 500mg 이상 섭취 시 당뇨병 발병 위험이 15% 증가했고, 구아검은 11%, 잔탄검은 8%, 구연산나트륨은 4% 증가했음. 모노 · 디아세틸타르타르산 에스테르는 하루 100mg 이상 섭취 시 당뇨병 발병 위험이 4%, 카라기난은 3% 증가했음. 아라비아 검은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 증가했음. 유화제 노출 주요 경로는 초가공 케이크, 비스킷, 유제품으로, 전제 섭취량의 각 18.5%, 14.7%, 10% 등을 차지했음. 스루르 교수는 "놀라운 점은 식물성 음료, 향이 첨가된 요거트 등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판매되는 식품에 해당 유화제가 함유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해도 영양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음. NSERM 마틸드 투비에(Mathilde Touvier) 박사는 "이번 코호트 연구 결과로 확인된 유화제와 당뇨병 사이 상관관계의 메커니즘을 혈액 표지, 장내 미생물 변화 등으로 후속 연구할 것"이라며 "첨가물 혼합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음.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Trusted Source'에 최근 게재됐음.

3)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 '질병치료제'로 둔갑 (2024-05-09,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 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 고발 조치했다고 밝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 ·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음.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함.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 판매,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음.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말기암 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었음.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 · 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함.

3. 원산지표시

1)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허위 표시 제조업자 영장 (2024-04-25,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25일 고춧가루 원산지를 수년간 속이고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고춧가루 제조업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t과 국산 고추 8t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3억6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음. A씨는 이 밖에도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를 만든 혐의도 있음.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 외 별도 고추씨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관원 관계자는 "고춧가루 원산지는 육안식별이 어려워 표시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면서 "농식품이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화(☎1599-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함.

2) 국산이라더니… 중국산 콩 340t 포장만 바꿔 유통한 일당 적발 (2024-05-29, 연합뉴스)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만 바꿔 시중에 대거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이 같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힘.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음.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은 B씨는 수입한 중국산 콩 340t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A씨에게 팔아 약 1억원을 챙김. 개인 무역업자 60대 C씨는 A씨가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구입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 2천만원을 챙김. A씨는 이렇게 얻은 중국산 콩을 나머지 일당 3명과 재고관리, 포대갈이, 배송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중에 유통함. 국내산인 줄 알고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들은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달했음.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 팔려나갔음. 이렇게 시중에 판매한 금액만 13억원으로, A씨는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김.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함.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kg당 6천~7천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kg당 약 4천원에 판매함. A, B씨는 단속에 대비해 생산 · 판매 장부를 허위 작성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

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거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전달해 자금 추적을 피함. 경남농관원은 한 달간 잠복 수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 범행을 밝혀냄. 배우용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이번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함.

3)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2024-06-07, 조선일보)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고사리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벌여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힘.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 가운데 중국산 고사리를 제주산으로 위장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중국산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서귀포시 소재 한 음식점은 중국산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고객이 물어보면 제주산이라고 위장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서귀포시의 또 다른 업체는 포장지 앞면에 '제주고사리'라는 표시를 한 뒤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다 적발됨.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함.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농식품 표시사항 위반으로 2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2건, 고사리 5건, 쌀 4건이었음. 위반업소는 음식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 판매업체 7건, 양곡 판매업체 4건, 식품제조업 2건, 축산물 판매업체 1건이었음.

4. 수입식품

1) "나도 부업 좀 해볼까"…'수입식품 대행' 5년 새 8배 증가

(2024-03-27, NEWSIS)

최근 직장인 또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창업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에 등록된 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제2의 월급, 이른 은퇴를 뜻하는 파이어족 등이 유행인 가운데 월 매출 수 천만원을 기록하는 파워셀러들의 등장은 이런 인터넷구매대행 창업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임.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등록된 수입 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는 2020년 4576곳에서 2024년 현재 3만6914곳으로 약 8배 증가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576곳에서 2021년 8392개, 2022년 1만9001개, 2023년 3만3419개, 2024년 3만6912개로 집계됨. 이 같은 증가세는 월 매출이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한다는 파워셀러의 영향이 큼. 일부 파워셀러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업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직장인, 취준생, 가정주부 등이 인터넷 구매대행에 눈을 돌린 것임. 실제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도 수입식품을 비롯해 여러 제품의 구매대행 노하우, 인허가 절차, 확장 전략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음. 저렴한 교육프로그램은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있기도 하지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 프로그램도 판매 중임. 최근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자 등록을 마친 A씨는 "일부 인기 교육프로그램은 대기만 3개월이 걸린다"며 "블로그나 책으로 오픈된 정보를 접할 수도 있지만 교육 비용이 높을수록 차별화된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귀띔함. 이처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업등록은 반드시 필요함.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고절차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KHSA)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

류를 구비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 기본 정보,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됨. 또 영업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구매대행이 금지되어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 성분 함유 제품을 확인함. 식약처는 지난 25일에도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 성분으로 새롭게 지정 · 공고함. 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수입금지 성분 목록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음. 계속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른 폐업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지난해 구매대행업을 시작했던 B씨는 "약 10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했다"라며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결국 빈손이 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함.

2) 무신고 ·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서울시, 판매업소 12곳 적발

(2024-05-09,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음. 각 자치구에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확인하고 한 번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이 단속 대상이었음.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로 국내에 수입식품이 들어오고 있고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합동단속을 하게 됐다고 사법경찰단은 밝혔음. 위반 내용을 보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식품 판매 8곳, 제품을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곳임. 1~2주 간격으로 가게를 찾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고기 양념, 육포 따위를 보따리째로 사 판매한 사례, 업주가 직접 외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식품을 사 들고 와 유통한 사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해 판 업소 등이었음. 정식 수입된 식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내놓은 사례 등도 있었음. 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1곳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할 예정임. 무신고 · 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음.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힘. 신고와 제보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음.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함.

3) 수입 식품 전자 심사 모든 식품으로 확대…"시간 · 비용 절감"

(2024-05-20, KBS뉴스)

농 · 축 · 수산물과 식품첨가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던 수입 식품 전자 심사가 오늘(20일)부터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전자심사 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오늘(20일)부터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전자 심사 대상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으로, 기존에는 식품첨가물과 농 · 축 · 수산물만이 해당되었음. 식약처는 이번 전자 검사 대상 확대로 서류 검사가 24시간 가능해져 처리 시간은 물론,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함. 전자 심사는 영업자가 수입 신고서를 내면 전자 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과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결과가 적합하면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되고, 부적격일 경우 수입 식품 검사관이 해당 식품을 재확인하게 됨.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수입 기구 · 용기 · 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 · 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5. 식중독사고

1) 훈련참가 예비군 식중독 증세…검사자 8명 중 7명 노로바이러스

(2024-04-12, MBN)

경북 구미에서 당일치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이 점심 도시락을 먹은 후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음.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구미의 한 부대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2명이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같은 달 28일 보건소에 접수했음. 군 당국은 해당 부대에서 당일치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 280여 명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냄. 식중독 증세를 보였던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들 중 7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당시 도시락은 부대가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 받았고, 김치와 어묵볶음 그리고 제육 등 반찬 6종과 백미로 구성되었음.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구토, 설사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도시락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 군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수질검사나 환경조사에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까지는 예비군 훈련과 식중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기 조심스럽다"고 전함. 보건 당국은 세부 조사를 진행 중임.

2) '구독' 도시락 믿고 먹었는데…식중독균 발견된 4개 제품은

(2024-04-16 중앙일보)

도시락을 정기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됨.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독형 도시락 서비스 5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세균이 나왔음. 구독형 도시락 서비스는 일정 비용을 내고 원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것으로, 최근 1~2인 가구들 사이에서는 식비 절감, 편의성 등을 이유로 구독형 도시락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음. 먼저 한국푸드씨스템이 제조 판매한 '굶지마요참치덮밥'에서는 살모넬라균, 본핏의 '하이라이스&소시지'에서는 대장균이 각각 검출됨. 맛과벗 · 워낭인터네셔널 '부채살 수비드'와 나비야 · 에스크기획의 '평양비빔밥'에서는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가 발견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 · 판매한 사업자들이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마쳤으며 해당 제품 점검 등 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음. 소비자원은 아울러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권고함. 또한 "냉장 · 냉동식품을 조리 · 섭취할 때 제품에 표시된 가열방법과 시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함.

3) 전주 소재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자 집단발생

(2024-05-16, 연합뉴스)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6일 전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27명과 교직원 4명이 전날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 등을 보였음. 증상자가 발생하자 학교는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도 교육청은 식약처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대응 회의를 갖고 지난 13일과 14일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급식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4) 냉면 먹고 1명 사망 · 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

(2024-05-30, 서울신문)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숨지고 30여명의 손님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업주가 징역

형을 선고받음.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음.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냉면을 먹은 손님 중 사망자가 발생함.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음.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봄.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살모넬라는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데, 섭취할 경우 복통 · 설사 · 구토 · 발열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킴. 살모넬라균은 다른 오염균들과 달리 냄새와 맛 등으로 전혀 구별할 수 없고,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번식이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함.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다수가 계란 또는 계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을 먹고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 육전이나 계란지단을 얹어 제공되는 밀면, 냉면 등의 경우 조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 세척하지 않은 계란이나 날계란, 덜 익힌 계란, 오염된 육류 등을 먹는 경우 식중독 감염 가능성은 커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구매 시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된 것을 선택해야 하며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안내함. 되도록 도착 즉시 냉장고로 옮기고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함. 요리 전 달걀을 반드시 세척하고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해 쓰며 75℃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가열해야 함. 식중독으로 인한 배앓이 증상이 나타날 때 지사제를 성급히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함. 설사를 통해 뱃속의 나쁜 균을 내보내는 것이므로 지사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됨.

6. 건강기능식품

1) 식약처, '5월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2024-04-08, 히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600여개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음.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 ·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임.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 · 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판매 △부당한 표시 · 광고 △기타 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 단계 정밀 검사도 강화할 계획임.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 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 · 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임.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음.

2)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 승인

(2024-05-16, 메디포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부터 승인받았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의 우수 판매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기준, 소비자트렌드, 이상사례, 판매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연령,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짐.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며 판매에 대한 자격증 소유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어 신규 고용 촉진 및 新 직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및 단체 접수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임.

3) 건강기능식품 비염 · 염증에 효과?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

(2024-05-21,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 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음.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음. 이번 점검에서는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의 기능성분 · 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 ·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 · 검사를 병행했음.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 · 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또,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 · 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돼 회수 · 폐기 등을 요청했음.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VIRUN(미국) '주키 리포조말 비타민C(복합영양소제품)', BIOSE INDUSTRIE(프랑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IMB002(프로바이오틱스)', EXCELSIOR NUTRITION INC. DBA 4EXCELSIOR(미국) '레쥬브(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임.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음. 주요 위반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의 예방 · 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 · 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임.

7. 유해물질&잔류농약

1) 국내 수입된 중국산 당근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 "판매 중단 · 회수"

(2024-03-26, KBS뉴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식품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 소재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신선 당근'에서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보다 더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음. 트리아디

메폰은 과일과 채소를 살균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음.

2) "혹시 우리 것도?" 중국산 건고추 잔류농약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2024-03-26, KBS광주방송)

중국산 건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음. 식품의약안전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음. 수대상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수입 일자가 2023년 9월 1일인 제품임. 10kg씩 2개를 한 조로 20kg 단위로 포장돼 있음. 식약처는 이 건고추를 위탁 검사한 결과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농약인 클로르메콰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고 전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며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함.

3) 봄 제철 냉이 · 두릅 · 머위 등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2024-03-28, 한겨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냉이 등 봄나물류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압류 · 폐기했다고 28일 밝혔음. 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3주간 도내 대형마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냉이, 달래, 봄동 등의 봄나물류 19개 품목 149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함.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39종,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여부임. 검사 결과, 두릅에서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기준 0.01mg/kg, 검출량 0.38mg/kg), 머위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기준 0.05mg/kg, 검출량 0.08mg/kg)과 살충제 성분인 카두사포스(기준 0.05mg/kg, 검출량 1.48mg/kg), 냉이에서 제초제 성분인 디클로베닐(기준 0.01mg/kg, 검출량 0.02mg/kg)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농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음. 연구원은 관계기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임. 잔류농약은 세척 및 가열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유해 물질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음.

4) "땅두릅 · 우엉잎 드실때 조심하세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2024-04-21, 영남일보)

봄철 밥상에 오르는 땅두릅과 우엉잎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됨. 21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4~29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농산물 30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납 ·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9개 농산물에서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등 34개 농약 성분이 검출됨. 이 가운데 우엉잎과 땅두릅에선 살충제 성분인 '에트프로포스(Ethoprophos)'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각각 0.038mg/kg, 0.33mg/kg 검출됨. 특히, 땅두릅은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Diazinon)'까지 검출(0.101mg/kg)됐는데, 허용 기준치를 무려 10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2019년부터 시행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다이아지논 허용 기준치는 0.01mg/kg임. 이를 위반하면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땅두릅과 우엉잎을 제외한 17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출량이 허용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적합' 판정을 받았음. 시금치 등 14종 농산물에서 납(Pb) 성분, 냉이 등 6종 농산물에서 카드뮴(Cd)이 각각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 기준치(엽채류 납 0.3mg/kg 이하 · 카드뮴 0.2mg/kg 이하, 엽경채류 납 0.1mg/kg 이하 · 카드뮴 0.05mg/kg 이하)를 밑돌았음. 주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미나리를 대상으로도 간질충 · 작은와포자충 · 람블편모충 등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돼 안전성에

서 합격점을 받았음.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봄철 나물류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은 사계절 유통되는 농산물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8. 기타

1) 국 · 탕 · 찌개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지정

(2024-04-01, 헬스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국, 탕, 찌개류도 심사를 거쳐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음.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 · 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 형태 ·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 · 가공한 제품임. 지금까지 액체류는 목으로 넘길 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지 않았었음. 농식품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함 보편식으로 확장했음. 지정 범위가 확장되면서 국, 탕, 찌개류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음. 고령친화우수식품은 지난 2021년부터 농식품부가 운영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모두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지정했음. 176개 중 102개는 반찬류, 51개는 죽류이고 23개는 기타류로 분류됐음. 기업별로는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 제품이 지정됐음.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분류되는데, 현재 1단계 90개, 2단계 12개, 3단계 74개임.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고령 친화 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지난해 실증사업으로 65세 이상 180명에게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 비율이 11.7%에서 6.5%로 줄었고,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했음.

2) '당근 · 번개'서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해진다

(2024-05-08, 한겨레)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게 됨. 현재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음. 앞서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소규모로 재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가 판단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됨.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이들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 · 운영될 예정임. 거래 제품은 미개봉 상태는 물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함.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대상에서 제외됨.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함.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됨.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3) 식품 연화제 든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당뇨병 발생 늘어

(2024-05-09, 조선일보)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가공 과일, 가공 유제품 등 초가공식품을 만들 때에는 모양, 색깔, 식감 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분과 기름 따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다양한 식품 유화제를 씀. 최근 식품 유화제가 포함된 음식 섭취와 당뇨병 발병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논문 영향력 지수가 매우 높은 학술지 랜싯의 당뇨대사지에 발표됨. 연구는 프랑스 영양 조사 연구에 참여한 평균 43세 프랑스인 10만4139명을 대상으로 했음. 6개월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 모든 음식을 조사하고, 당뇨병 발생 여부를 관찰했음. 연구 대상자들은 주로 초가공한 과일, 야채, 케이크, 과자와 유제품을 통해서 식품 유화제를 섭취했음.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1056명에게 당뇨병이 발생했음. 분석 결과 당뇨병 발병 위험은 식품 유화제 중 카라기난을 하루 100mg 섭취 시 3% 증가했고, 포타슘 포스페이트는 500mg당 15%, 지방산 에스테르는 100mg당 4%, 시트르산은 500mg당 4%, 구아검은 500mg당 11%, 아라빅검은 1000mg당 3%, 잔탄검은 500mg당 8% 증가했음. 식품 유화제는 장내에서 마치 세제처럼 작용하면서,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서 유익한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 장내 세균 교란은 장관에 염증이 나게 해 단당류 흡수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식품 유화제는 이미 심혈관 질환 및 암 발생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음. 음식은 예쁘고 맛있게 가공한 것보다, 투박하고 덜 자극적이더라도 식품 가공제 없이 재료 그대로 먹어야 건강에 좋음.

4) 中 '알몸 김치' 영상에 중국산 줄었다더니…'충격 실태'

(2024-06-04, 한국경제)

고물가 여파로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김치 적발 건수가 1년 새 20% 넘게 급증함. 정부는 내년부터 김치의 원산지 판별 품목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배추김치를 적발한 건수는 760건으로 전년(624건)보다 21.8% 증가했음. 원산지 거짓 표시는 549건으로 25.3% 늘고 원산지 미표시는 211건으로 13.4% 증가함. 전체 적발 건수는 △2020년 784건 △2021년 727건 △2022년 624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반등함.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저렴한 외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28만6545t으로 전년(26만3434t)보다 8.8% 증가했으며, 이는 2019년(30만6049t)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임. 수입 김치의 99.9%는 중국산임. 중국산 김치는 2021년 남성이 알몸으로 물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현지 영상이 퍼지면서 수입량이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음. 배추와 고춧가루 등 김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임. 중국산 김치 10㎏ 가격은 1만원대로, 국내산 김치의 30~50%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농관원은 김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내년부터는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 판매하는 맛김치도 단속한다는 방침임. 현재는 포기김치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으며, 원산지 판별 기술도 개선하고 있음. 김치의 무기질, 유기질 등 성분을 측정하는 분광분석 장비를 이용하면 5분 만에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함. 농관원은 수입이 늘고 있는 다른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고 있음. 돼지고기의 경우 자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이용해 원산지를 판별함. 국내산 돼지는 돼지열병 항체가 있지만, 수입 돼지고기에는 항체가 없다는 점을 활용, 기존에 4일 걸리던 검사 기간이 5분으로 단축됐는데, 정확도도 95% 이상으로 평가받음. 박성우 농관원장은 "현재 곡물의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원산지 판별 기술을 개발 중인데, 정밀한 분석 기법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어 원산지 과학수사대(CSI)로 불릴 정도"라고 강조함.